

## 中國 經濟의 當面課題와 改革

金 汝 善\*

### 一. 형성중의 중화경제권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그 동안의 국제경제 틀 속에 최근 소위 중화경제권이라고 하는 중국 중심의 경제권이 세계경제 속에서 강력하고도 급속히 그 한 축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중화경제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체나 조직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개방 후에 하나의 민족이 문화적 동질감에 의한 자연스럽게 경제가 서로 유기적 통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홍콩의 중국 반환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화경제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 보유고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3위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화 경제권의 형성은 아주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과 독립된 관세지역이 실체 없이 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인근 지역에 그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매우 주목 할만하다.

1. 일반적으로 중화경제권이라 하면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의 복건성과 광둥성을 연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제권역을 지칭한다. 이를 소중화 경제권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개방이후 대만과 홍콩의 자본이 중국의 두 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현재는 남중국의 두 성은 대만과 홍콩의 생산거점으로서, 홍콩과 대만은 남중국의 중계무역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관계를 심화시켜가고 있다. 소중화경제권은 십여 년 간 3배의 무역량의 증가를 가져왔고, 세계무역량의 6.6%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sup>1)</sup>. 소중화경제권은 현재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중국 개방후 지금까지 약4배의 투자 증가세를 가져오는 등 동남아 경제권과 현재 매우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경제에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최근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이 점차 확대되어 중국대륙 전역으로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지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 홍콩과 대만의 자본은 그 동안 중국 연해 지방 중심의 투자와 경제관계에서 탈피하여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

\* 중국 무한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1) Barry Naughton, "The China Circle: Economics and Electronics in the PRC, Taiwan and Hong Kong". (Brooking Institution Press, 1997), 49-55.

국 정부도 이제까지의 연해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내륙으로 그 경제 개발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제는 대중화경제권이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3. 결국 중국의 경제가 지방별로 고루 발전하여 그 연계성을 맺어 가는 것을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중화경제권이 완성되어가기 위하여서는 중국경제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서방국가와의 통상마찰의 원만한 해결, 홍콩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 그리고 대만과의 양안관계 등과 같은 장 단기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야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경제권은 중국을 그 중심 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중국경제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 二. 중국경제의 현황과 개혁

비록 작년의 대내외적인 악조건에서도 7. 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고 하나 중국의 경제가 최근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금융시스템의 낙후와 부실채권,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기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의 통제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점차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체제와 관련된 딜레마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혁의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 1. 중국 경제의 현황

90년부터 96년까지 중국은 고도 성장과 더불어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소매물가지수가 한때 21.7%까지 상승했으나 93년부터 시작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물가 안정화를 추진하여 97년에는 0.8% 상승에 그치는 등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96년 이후 총통화량(M2)은 1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98년의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전년 대비 0.8% 하락하였으며<sup>3)</sup> 금년에도 1-3월까지 다시 3.5%의 소매물가지수가 하락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는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급증하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3차 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다각도의 경제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다. 최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e Book, (Tapei, 1996), 144.

3) 최근 중국에서 물가와 관련한 TV가격 전쟁이 화제가 되고 있다. 97년에 29인치 칼라TV가 5천원 정도에 비해 현재는 약 2500원 정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98년 10월 장흥, 강가 등 TV 생산업체 10개 사가 최저가격을 정하고 동 가격 이하로 가격책정을 안 하기로 결의하는 가격카르텔을 형성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가격 카르텔에 대하여 정부가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카르텔 역시 최근에 한 회사가 다시 가격을 인하하면서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5월 6일 중국 내수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8개의 업체가 6월30일까지 생산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經濟報(5月 30日).

개인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8년 통계로는 제3차 산업이 GDP의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물가는 오히려 98년 보다 약 10% 상승하였다<sup>4)</sup>.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에 따라 중국정부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1년 단위 저축성 예금의 금리는 2.25% 이며 대출금리는 5.85%를 유지하고 있다<sup>5)</sup>. 금리 인하정책은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증권시장이 단기적으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호시(滬市)라 불리는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시(深市)라 불리는 심천 증권거래소가 있다. 현재 이들 양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약 851개에 이르고 있다. 97년 6월에 비하여 주가지수는 약 30% 하락하였다가 최근에 금리인하에 힘입어 상해, 심천의 거래액이 320억 인민폐로 98년초 이후 최고의 거래액을 기록하였고, 주가는 상해가 1283.02, 심천이 3180.12로 연중 최고치를 각각 기록하였다<sup>6)</sup>.

개방이후 매년 10%정도의 지속적인 무역 성장률을 달성한 중국은 작년 동남아의 경제위기 이후에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의 하락과 무역상대국의 무역 둔화로 인하여 처음으로 0.4% 하락하는 3240억불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올해도 1/4분기에 만 이미 3%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 대외경제 역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456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통계상으로 약 0.6%의 성장이 있었지만 실행한 투자액은 예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따라서 국제무역이 GDP의 20%를 차지하고 고정자산 투자 중 27%가 외자도입에 의존하는 대외의존형 경제체제를 지향하고<sup>7)</sup>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2. 경제개혁과 대책

중국정부는 98.3월 개최된 제9기 전인대에서 국유기업, 금융, 행정을 개혁 3대과제로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3월에는 헌법까지 개정하여 사유재산제를 일부 인정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과 조치를 단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 국유기업 개혁

인구의 40%가 종사하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달하는 중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유기업이 만성적자와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현재 중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 통제 경제 체제하에서와 달리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시작된 이후에 국유기업은 금융기관 불량채권의 80%와 현재 진행중인 대량 실업의 진원지로서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골치 덩어리가 되었다. 국유기업은 기업의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아직도 계획 경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중국 경제개혁의 관건이 국유기업을 여하히 개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여 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혁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sup>8)</sup>. 현재 중

4) 劉國光·王洛林·李京文, 『1999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經濟藍皮書)』(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194-198.

5) 證券報 3면 (5월 27일)

6) 證券報(1999. 5. 27.) 제2면.

7) 劉國光·王洛林·李京文, 231-233.

8) Barry Naughton, "China's Emergence and Prospects as a Trading N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은 대략 3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는데, 주식제로 전환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변경, 부실기업의 파산 그리고 자산 매각, 흡수합병 등의 방안이다.

1) 주식회사제로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것이었다. 주식회사제로의 전환은 결국 소유제 개혁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합리화에 있는데 그 동안 일정한 소수 국유기업을 시범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한 대부분 국유기업의 소유형태를 보면 국가주식 60%, 법인주 20% 그리고 일반 공모주가 20%의 형태로 되어 있어 정부가 아직도 통제를 가하고 있다<sup>9)</sup>. 하지만 이러한 주식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대형 국유기업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만이 조직을 전환하였다. 한편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여 주식회사로 전환 후 종업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경영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소유권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별 실효성이 없어 효과는 미진하다<sup>10)</sup>.

2) 경영상태가 부실한 국유기업은 종업원을 정리하고 혹은 서비스업 등에 재취업시킨 후 파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파산 이후에는 정부가 채무를 보전하는 등 마무리를 해주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파산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별도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파산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서 하는데 관리와 법원이 서로 결탁하여 계획적인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국유기업의 과도한 계획적 파산에 대해 개혁 사찰관을 파견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찰을 받기 전에 서둘러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국유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1998년에 약 6000여건의 파산 안이 접수되었다고 한다<sup>11)</sup>. 국유기업의 만성적자 상태에 따른 은행유자나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도 파산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3) 국유기업 개혁에서 비교적 실효성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 자산 매각이나 국유기업간 또는 국경간 M&A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유기업의 대다수가 파다채무로 기업간 M&A가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극소수이다. 국가 재산에 대한 거래는 국유 자산 관리국이나 체제 개혁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사영기업의 국유기업에 인수에 대하여 허가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 지방 정부 관할하의 국유기업에 대하여서는 최근에 국경간 인수 합병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위원회가 중국의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Activity, 2: 1996, 312-313.

9) A주식은 소유주체에 따라 국가주식과 법인주식이 있다. 국가주식은 과거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할 때 국가의 자산을 기명식 주권으로 전환하여 국가에 양도한 주식으로 정부 참여 지분을 말하며, 법인주는 국유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출자하여 주권으로 전환한 주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의 직상장은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법인주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지간에만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다.

10) 唐堅, 『中國企業資產重組類型案例』(四川大學出版社, 1998), 35-55.

11) 陳正雲, 孫福全, 『企業破產與破產操作』(法律出版社, 1998), 17-18.

이제까지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M&A 방식을 분석해보면 크게 비상장 기업에 대한 방식과 상장기업에 대한 M&A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상장 기업에 대한 M&A 방식은 크게 3가지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에 기진출 외국기업이 국유기업의 자산을 전부 매도하는 방안으로 피매수기업은 매수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이다. 둘째, 외국투자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국유기업을 지배하거나 매수하는 방안이 있다. 중국정부도 이 방안은 자본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국유기업을 매수하는 방안이 가장 전형적인 국유기업 M&A 방안으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증자를 통한 합자기업의 매수방안이 있다. 이는 먼저 중국 국유기업과 합작이나 합자를 통하여 먼저 소액투자를 하여 외자기업을 설립한 후 사업성 유무의 판단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계속 투자액을 확대하여 결국 국유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안이다.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는 중국 증권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sup>12)</sup>.

4) 위의 방안들은 중국의 체제와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현재 기업내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것이 정리해고라는 말이다. 작년통계로 약 700만 명의 국유기업 종업원이 정리해고를 당하였는데 실제로 약 2천만명 이상이 국유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문을 떠났다고 한다. 이는 현재 경기침체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up>13)</sup>.

## (2) 금융개혁

국유은행의 과도한 부실채권, 방만한 금융체제 등은 중국 금융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전반적인 금융체제의 불안정에 따라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 외환관리의 강화, 중앙은행 기능 강화, 은행제도 개혁, 비은행 금융기관 정리, 관련 법규제정 등 국내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1) 중국은 2년 이상의 연체 채권 중 회수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부실채권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인민은행장은 현재 중국의 부실채권은 은행대출의 약 6%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은행 대출액 잔고 등을 판단하여 보면, 그 규모는 약 3700억에서 4500억 인민폐로서 GDP의 20%에 해당되며, 4대 국유은행 대출의 80%가 국유기업에 대출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채무위기와 상대적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알 수 있다.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은 80년대 중반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무상대출이 유상대출로 전환되면서 발생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4)</sup>.

인민은행은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600~700억 인민폐 정도를 상각할 계획으로 있다<sup>15)</sup>. 또한 국유은행의 경영정상화와 국제청산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달성하도록

12) 劉李勝·邵東亞, 『外資并購國有企業』(中國經濟出版社, 1997), 16-18.

13) 劉國光·王洛林·李京文, 53.

14) 江瑞平, 『國有企業的改革和中國的選擇』(廣東人民出版社, 1995), 359-361.

록 2,700억 인민폐 규모의 특별 국채를 98년에 발행하였다. 그리고 부실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선진국의 5단계 채권분류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상환기간 20~30년의 장기 국채를 3년에 걸쳐 총 8천억 인민폐 규모로 발행하여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과 교환하는 국채교환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은 새로운 전문처리 은행에 집중시켜 중장기적으로 정리할 예정으로 있다.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총액 대출 한도제를 폐지하여 은행에게 자율적 경영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으로 대출실적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금융과 같은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하여 대출을 장려하여 현재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sup>16)</sup>.

2)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직무수행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지만<sup>17)</sup> 실제로 정부가 인민은행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하기 때문에 금융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지방정부의 인민은행 지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많아 98년부터 총 46개의 인민은행 지점을 9개로 통합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연방 준비은행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인민은행의 독립성 확보 및 지방 금융기관의 감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등 4대 국유 상업은행도 인민은행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지점 위치가 중복·분산되어 있고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국유 상업은행에 대한 개혁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sup>18)</sup>.

3) 금융개혁에서 현재까지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정리이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은행 신탁투자회사, 중국농업투자회사 그리고 중국창업투자회사 등을 정리하였고 최근에는 광둥성의 광동투자신탁회사와 해남성의 해남발전은행을 파산 조치하였다. 이는 그 동안 부실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파산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광동투자신탁회사는 자회사까지 파산하여 인근 홍콩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정부 보증아래 약 20억불의 외화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중앙정부가 채권 상환을 거부하여 심각한 신용하락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4)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금융개혁은 국유은행 위주의 근본적인 금융시스템을 경영 합리화하는 방안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금융개혁을 민영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유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감을 단기간에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현재 금융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려하고 있다.

15) 戴相龍, 『中國金融改革與發展』(中國金融出版社, 1997), 27.

16) 劉國光·王洛林·李京文, 277-283.

17) 중국인민은행법 제7조

18) 戴相龍, 41.

## 2. 대외경제

### (1) 서설

자본과 기술 등이 부족한 중국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가 외자 도입이나 국제무역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개방이후 중국은 매년 10%정도의 무역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동남아의 경제위기 이후에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또한 무역상대국의 무역 둔화로 인하여 처음으로 0.4% 하락하는 3240억불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출이 여전히 0.5% 증가하는데 힘입어 무역수지는 예년과 같이 약 43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도 456억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통계상으로 약 0.6%의 성장이 있었지만 실행한 투자액은 예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sup>19)</sup>.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대외무역은 올해도 1/4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국제무역이 GDP의 20%를 차지하고 고정자산투자 중 27%가 외자도입에 의존하는 대외의존형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이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대략 3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는데, 대략 인민폐의 평가절하, WTO의 조기가입 그리고 외자도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2) WTO가입

중국의 WTO가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86년 중국은 GATT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UR협상의 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에서는 중국이 GATT Observer 자격으로 UR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였다. 1987년 3월에는 중국의 가입 실무협상 작업반이 설치되었고 1994년 12월 20일 까지 19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WTO출범이후에 4차례의 공식협상 진행하였지만 중국의 WTO가입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정부는 20세기 이내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WTO사무국 그리고 미국 등과 이에 관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가입협상에서는 미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가트가입협상을 미국과 중국간의 쌍무적인 무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중국총리의 미국 방문 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협상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들은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1) 중국이 15년간 협상을 하면서 WTO에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경제는 이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어 그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국경 경제에 대한 정당한 질서를 형성하여 주는 것이 WTO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경제의 UN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강대국으로서 역할과 면모를 발휘하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혁을 표명한 이후로 중

19) 劉國光·王洛林·李京文, 285-288.

국은 대외무역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옴과 동시에 많은 국가와 통상마찰을 심화시켜왔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지적재산권문제, 해마다 갱신하여야하는 MFN문제 그리고 무역 역조 문제 등에서 많은 통상마찰이 있었는데, 이러한 통상 문제는 항상 양자간 협상시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중국에 많은 부담이 되어왔다. 또한 매년 200억불 가까운 중국제품의 불공정 무역 피소는 중국으로서는 시급히 제도권내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고도 경제성장의 달성이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국제경제의 제도권내에서 진입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sup>20)</sup>. 또한 앞으로 진행될 환경, 부패, 관세와 농업문제 등과 같은 뉴라운드에는 중국과 같은 개도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뉴라운드가 타결되기 전에 가입하여야하며, 최근에 WTO 가입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대만보다 빨리 가입되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2) 현재 협상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시장개방과 서비스 무역, 국영기업과 보조금 문제, 가입자격 그리고 무역제도의 투명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재 수입관세율은 평균 수입관세율은 17% 수준으로 개발도상국 평균관세율(15% 내외)에 근접한 수준에 있다.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균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며, WTO 가입노력에 따라 향후 2000년 15%, 2005년 10%, 2010년 5% 평균관세율 수준으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1)</sup>. 이에 선진국들은 10%이하로 WTO 가입 전 초기 관세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외무역권을 기본적으로 허가제도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쿼타제와 함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협상에서 빠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상업적 주재형태의 시장진출과 기본통신산업은 이미 이번 중국 총리의 미국 방문시 상당부분 시장 개방 조치를 취하였다.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9개의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인민폐 업무를 하고 있고, 7개의 외국보험회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아주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WTO협정은 1947GATT와 달리 독립된 개도국 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입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 협정상의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를 받게되는 잇점이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경제규모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하여 선진국 자격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통상법의 투명성은 현재 중국과 무역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법률과 제도의 차이와 정부 부서의 내부자료의 고수 등은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밖에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와 불공정 무역문제 등 아직 해결하여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20) 易小淮·唐小兵, 『貿易自由化的挑戰』(中國編譯出版社, 1998), 59-63.

21) 현재 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국관세율표상 최고 관세율 수준인 50~10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오토바이는 60%의 높은 관세 부과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의 경우 컴퓨터 관련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30~6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3) 외자도입

중국 경제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성장의 한 축이 외자가 담당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체 고정자산 중 24.8%가 외자에 의한 투자이며 수출 총액 중 투자기업에 의한 수출비중이 28.7%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중은 더욱 더 높아질 소지가 있다. 98년 말까지 중국이 이용하고 있는 외자는 약2700억 불로서 12만여개의 외국인 기업을 설립하여 1천 7백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sup>22)</sup>.

아시아의 금융사태이후 외자도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의 외자도입도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외자 도입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투자에 의한 외자도입은 주로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콩과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화교 자본의 투자가 60%를 달성하고 있다. 간접적인 외자도입은 국제증권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주식상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자주의 발행과 외국의 투자기금의 활용<sup>23)</sup> 그리고 B.O.T를 통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외자도입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중 단연 외국인직접투자자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는 1995년 발표된 “외국인투자에 기본방향에 대한 임시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에 의하여 규제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금지·제한·장려·허가 등의 4가지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포지티브체계(Positive list)라고 볼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건이 다르며 각 지방마다의 규정도 다른데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제도는 조세의 우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인센티브는 중국의 내국민대우 위반에 대한 회석용으로 중국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면밀히 보면 유럽이나 기타개도국보다 유리한 것도 없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전폭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97년에 투자목록상의 외국인 투자업종을 대폭 확대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개방은 미진하며 최근 금융과 통신 부문에 상당 부분 업종을 개방하였다.

2)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주식은 크게 A·B 두 종류가 있다. A주식은 내국인을 상대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보통주식이며 B주식은 중국 증권 시장 내에서 발행하고 상장되지만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은 결국 B주식에 한정되는데 B주는 인민폐로 액면가를 표시하고 외화로 거래를 하는 특수한 주식의 일종이다. 현재까지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B주식은 50개로 약 22억불 정도이며 심천에는 51개로 약 20억불정도가 상장되어 있다. B주는 국유 대형기업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발행을 허가하고 있다<sup>24)</sup>. B주식 시장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현재는 사모발행으로 합작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더 많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서는 A, B주식의 합병을 통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22 劉李勝·万建偉, 「利用外資新方式」(企業管理出版社, 1996), 1.

23) 이는 현재 長江三峽담基金, 上海浦東開發基金, 新技術開發基金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24) 陳共·周升業·晁曉求, 「證券發行與交易」(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7), 45.

만 자본수지 개방과 연계되어 있어 수량과 금액으로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사영기업에 대하여서도 B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sup>25)</sup>.

3)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하는 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하고 인민폐로 액면가를 표시하며 외화로써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콩증시에서 발행하고 상장하는 주식인데 이를 H주식이라 한다. 이는 Hongkong의 첫 자인 H를 지칭하여 이름을 붙인 것으로, 또한 미국 뉴욕에서 발행 상장한 주식을 N주식 이라 하고, 그밖에 동경이나 싱가포르 런던 등지에서 발행하는 주식도 각각 그 시장지명의 의 첫 글자를 따서 T, S, L 주식이라고 부른다. 현재 B주식을 발행하는 중국기업은 회계제도와 거래투명도 등 많은 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B주의 시장규모와 가격은 국제 투자자에게 여전히 매력은 있지만 현재 상태로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이상의 확대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홍콩 증시에 대규모로 주식을 상장한 것은 홍콩의 중국 반환 후에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는데 1997년까지 총 29개의 기업이 홍콩에서 H주식의 발행 상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자도입액은 약 59억불에 이르고 있다.

#### (4) 인민폐의 평가절하

중국의 환율제도는 93년 12월까지 관리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무역부문과 무역외 부문에 대하여 결제환율을 차등화 하여 2중 환율제 시행하였다. 94.1월부터 은행간 매매에 의한 단일환율제도를 채택하면서 기존의 외국인에게 적용하던 이중 환율제인 외국인 태환권을 폐지하고 현재의 환율을 시행하였다. 인민폐에 대한 평가절하문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관심을 끈 경제이슈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과연 인민폐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각각적인 검토를 하면서 촉각을 곤두 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민폐에 대한 평가절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내년이면 결국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단행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당분간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1) 중국지도부의 인민폐평가 절하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표명에 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중국의 지도부는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공산당 지도자의 발표가 종종 국가의 정책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정부의 제일의 거시경제 목표가 지속적인 8% 경제성장을 달성이다. 만약에 인민폐가 평가절하 된다면 이 목표는 달성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곧 체제유지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재의 국제적인 금융은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있어, 인민폐 평가절하는 2차 아시아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아시아의 경기침체는 물론 세계경제의 공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의 통화는 경쟁적으로 평가절하가 될 것이며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는 다시 재

25) 國際商報(1999. 6. 14) 제1면.

26) 關於股份有限公司境外募集股份及上市的特別規定 第3條.

연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물경제도 동시에 붕괴하여 세계경제는 장기불황이 예상된다. 이는 결국 중국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어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이다.

3) 현재 중국의 외채규모는 약 1,460억불로 97년 말보다 150억불이 증가하였다고 한다<sup>27)</sup>. 전체외채 1,460억불 중 단기외채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외채중 대부분이 외국투자기업과 국유기업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이 차입을 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인민폐가 평가절하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국유기업 개혁과 은행의 지배구조개선에 있어 환차손에 따른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혁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4) 인민폐의 평가절하가 시도되면 단기간에 중국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으로 인하여 서방금융기관의 중국에 대한 채권회수가 시도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광둥투자신탁 파산안 처리시 중국 정부는 정부보증 없이 국유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을 모두 거부하였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는 곧 중국금융시장에 대한 신용이 저하되어 급격한 채권회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외자도입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5) 중국경제는 아직 폐쇄적인 구조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지만 국제경제에 있어서 그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이후에 중국 인민폐는 세계 금융계의 주목 대상이 되면서 이미 상당한 가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경제에 대한 신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중국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6) 홍콩의 안정적 성장과 번영은 중국 경제의 신뢰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홍콩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단순히 양 경제지역간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본다면 인민폐 평가절하는 홍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된다. 이는 이미 홍콩 금융시장이 신속히 안정이 되었고, 평가절하시 홍콩의 중계무역이 활발히 전개되어 침체된 홍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대심리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또한 이미 인민폐는 홍콩의 장외시장에서 평가절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이 된다. 하지만 심리적 연계성(psychological link)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평가절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홍콩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있다.

7) 종합적으로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외신용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국유기업이나 은행의 과도한 외채상환부담, 정치 외교적인 관계 그리고 중국 금융제도의 상대적인 폐쇄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가 높지 않아 핫머니의 유출·입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요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득보다 실

27) 인민일보 1999. 4. 22. 국가외환관리국발표.

이 많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급격한 대외교란요인이 없는 한 인민폐는 평가절하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三. 결 론

#### 1. 중화경제권의 형성과 동북아질서의 변화

중국경제에 대하여 모든 국제 경제조직이나 주요 국가들은 시장 잠재력, 높은 기초과학 수준 그리고 풍부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중국 경제 개혁은 그 성질로 보아 그렇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만큼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경제개혁에 대하여 매우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1) 중국은 현재 동서남북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중국전역으로 확대되는 중화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하여서 또 하나 주목해 볼만한 것이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화동 지방의 역할이다. 상해는 그 동안 개방정책이후 중국경제 개발의 최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먼저 상해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포둥이라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외자를 도입하여 현재는 중국의 금융중심지와 독립적인 경제구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상해의 경제 성장은 남북의 경제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여 왔다. 홍콩과 대만의 자본은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화동 지방에 대한 투자와 경제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고 단지 남중국을 중심으로 자본교역을 진행하여 왔다. 이는 남중국이 앞으로 계속 홍콩과 대만의 영향권속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가능하여서였다. 그러나 상해는 중국의 국내시장의 동향과 자본수지에 대한 개방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남북을 잇는 인프라의 구축은 대중화 경제권의 형성을 한 층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그 동안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동북을 중심으로 하는 발해만과 산동성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연계성을 심화시켜왔으며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도 흑룡강성간의 경제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여, 결국 중국의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남중국 중심의 소중화경제권이 동남아와의 경제관계에서 탈피하여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대중화경제권으로 형성한다면 동북아와 동남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렇게 독립적인 관세지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하는 것이 환율과 관세문제이다. 중화경제권 자체가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이 통화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시점에서 경제구조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중화경제권 국가 모두 많은 외환보유고가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환율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관세 역시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 만큼은 중화경제권이 형성되어져 가는데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WTO 출범 후 통상문제는 양자문제에서 다자간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 동안 WTO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경제체제에서 지역단위로 소규모의 경제체제를 형성하여 더욱 더 확고한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고하려는 것이 최근 국제통상관계의 질서 재편이다. 이러한 경제블록의 형성은 지금 국제경제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대중화 경제권의 형성은 어떠한 형태로든 동북아 경제권이 새롭게 재편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상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블록의 형성과 관련하여 향후 성장잠재력과 역내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인접국가로 무역 투자진출에 도움이 되는 국가 그리고 산업간 또는 산업내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 등과 같은 전략적 차원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역확대와 적극적인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를 보다 개방화하고 자유화하는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부분도 사실상 대부분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제 수세적인 통상정책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통상문제에 대처하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 등은 고려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을 한데 묶는 동북아 기능적 통합 형태의 경제권 형성을 시간적인 유예를 두고 한 번 검토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

## 2. 한중 통상 관계

중국은 우리 나라의 제 3위의 교역 파트너이고 전체 중화경제권을 포함한다면 이미 제일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간의 교역량은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다. 양국간의 경제 교역은 현 추세대로라면 매우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품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 우위의 경합 관계에 있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수입도 이제는 비교적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확대되는 등 한중간의 산업구조와 교역구조가 대체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모하여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1993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수지는 누계로 약 150억불의 흑자를, 또한 홍콩, 대만과의 교역량을 포함한다면 엄청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한·중간의 교역은 약 23%정도 하락하였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세 보다 대중 수입감소의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의 제일 큰 무역적자국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역역조문제가 한·중간 통상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최근의 무역역조는 산업구조의 차이

에서 오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고, 중국은 한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무역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현상이다.

(2) 중국은 매년 약400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신흥 무역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대하여 미국 등 주요 무역 관련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치와 같은 강력한 무역장벽을 행사하고 있는데 매년 100억불 이상의 중국산 제품이 반덤핑 피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자국산 제품의 반덤핑제소의 급증은 수입국의 차별적 무역보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규제에 대한 대처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반덤핑법 제정은 중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입법문제였다. 중국은 1997년 3월 총 6장 42개 조문으로 된 반덤핑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동년 12월 처음으로 외국산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결정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산 신문지가 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국제품이 반덤핑조사 대상으로 제소되었다.

현재까지 한국 국내산업의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수는 13건으로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전체 조사신청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중국 측의 반덤핑제소 공세 또한 상대적으로 많아 질 것이며 양국간의 통상마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중 무역관계에 있어서 냉철한 득실관계를 따져서 중국산제품에 대한 덤핑조사시 판정기준에 대하여 특별공시를 하던지 혹은 내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판정하는 것과 같은 쌍무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수입국에서 당하는 모든 반덤핑제소가 자국에 대한 보복성, 차별성 조치라고 여기는데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1988년에 “양국간 우호 경제관계 무역협정”에서 양국은 1994년 7월부터 양국간의 어떠한 반덤핑제소를 중지하기로 하는 기능적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적이 있어 한 번쯤 검토해 볼만한 제도일 것이다.

### 3. 새로운 대중진출방안

중국은 현재 우리 나라의 가장 큰 투자 대상국이다. 그러나 투자는 무역관계를 시작으로 기술이전 그리고 직접투자의 단계로 진행되어온 선진국과 달리 무역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초기에 실패로 이어졌으며 현재도 사정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 중국투자는 현지 한국투자업체에 의하여 많은 수출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양국간의 무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그 동안의 노-하우나 시장 분석 그리고 중국 내에서 국내상품을 인지도를 고려하여 본다면 이제부터 적기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 (1) 지방정부와의 협력강화

중국의 통상을 결정정책을 결정하는 대외무역관리기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원적인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경제무역위원회는 중앙의 대외무역합작부가 제정한 정

책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지방의 경제무역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대외무역업무를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하여야 될 사항이 각 지방의 무역회사는 중앙 대외무역경제합작부보다 지방정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지방 통상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정부간 통상관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는 신규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기업간 향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고, 환율변동에 신속히 대처하여 부품조달이 가능하고, 생산요소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각국의 규제를 적절히 회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 현지에서 유통망을 구축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에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우리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계속적으로 중국 현지에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유통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기술-판매 제휴를 통하여 효과적인 중국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 (3) M&A

중국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은 주식제 전환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변경이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업 지배 주체 이전만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식 국유기업의 민영화와는 그 개념이 달랐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권 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을 파산시키고, 자산 매각, 흡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있다. 현재 이러한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소유권 거래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외국기업들의 國有企業 M & A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M&A 사례는 시장 진입장벽의 극복, 중국내 파트너쉽 구축, 새로운 사업발굴 등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투자진출 전략으로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